

42호, 2003. 09

책을 열며 / 평화와 통일을 향한 일보일배를 / 문규현

토론회 지상중계 한미군사동맹의 비판적 고찰과 대안모색을 위한 토론회 / 신한미방위조약의 필요성 / 박기학

토론회 지상중계 / 현행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문제점과 신조약안 / 정세진

토론회 지상중계 / 토론문 최철영

특집 / 국방비 증액 과연 타당한가_함택영 교수 인터뷰 / 유영재

특집 / 자주국방과 주한미군 재배치는 종속적 한미동맹 강화의 두 축 / 정육식

특집 / 국방비 증액 및 무기도입 반대운동을 대중적으로 펼치자 / 유영재

기고 / 평화와 통일을 위한 8.15 민족대회 방북 기행문 / 김흥현

번역글 / 한국과 필리핀에 대한 간섭 반대! 전쟁을 끝내라, 지금 당장 평화협정을 체결하라!
아나 리자 카발레스(필리핀 민중연대 네트워크) / 번역:강영혜, 오혜란

지역평통사 탐방 / 인천평통사 이용수 / 정동석

참가기 / 한반도의 전쟁 종식, 평화협정 체결! _ 정진협정 체결 50주년, 워싱턴 자주 평화대회 / 홍근수

참가기 / 부안 핵 폐기장 건설 반대투쟁 현장을 다녀와서 / 조광수

평화단체 탐방 / 평화와 통일을 위한 시민연대를 찾아서 / 황윤미

평화카페 / 너무나 유명한 영화 '화성침공' / 오미정

회원글 / 평화군축, 자주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1,000명 회원 확대사업 / 박종양

평화와 통일을 향한 일보일배를

상임대표 문규현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을 창립하고 벌써 십여 년입니다.

그 세월 동안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목은 숭한 곡절을 뒀으면서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평통사 회원 모두 참 고생도 많았습니다. 정말 애쓰셨고 고맙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많은 보람과 기쁨을 맛봐 왔습니다.

아마 그것의 정점이 내부적으로는 지금 이 순간일 것 같습니다.

식구가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축하합니다!

평화를 염원하고 통일의 길에 헌신하겠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만큼 희열을 느끼는 순간은 없을 겁니다.

통일이라는 단어만 꺼내어도 바로 빨갱이로 단죄되고, 미국의 문제점을 잠시 비추기만 해도 매국노로 여론의 못매질을 당하던 암담하고 고통스런 시절을 우리는 통과해왔습니다.

물론 이것은 여전히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때에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신념을 잃지 않고 올곧게 이 길을 넓히고 키워온 회원 여러분이 저를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거듭 존경과 감사의 절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희망하는 평화와 통일의 목적지까지는 아직도 멀고 먼 여정이 남아있습니다.

거칠고 가파르고, 고비마다 낙담이 우리를 시험하려 들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길이 어찌면 삼보일배의 과정이었다면, 앞으로의 길은 일보일배의 마음과 정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제 몸을 한껏 낮추어 한 걸음에 절 한 번, 평화를 위해 한 걸음, 통일을 향해 절 한 번 그렇게 가야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이 평화와 통일의 길에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선 지금껏 그래왔듯이 우리 스스로가 더욱더 진심으로 헌신하는 것만이 가장 큰 힘일 것입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그저 가면 되는 길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가기로 한 길을 가노라면 마침내 종착점이 보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미선이와 효순이가 활짝 웃는 얼굴도 볼 수 있을 것이고, 남과 북을 자유로이 넘나들며 꽃게잡이 하는 어부들의 흥얼거림도 한껏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희망에 대한 간절함.

간절하게 일구는 희망.

이제 새로이 시작하는 이 역사적인 순간, 우리는 그 희망이 드디어 성취되는 또 다른 십년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 뜻깊은 시간에 다시 한 번 경건하게 자세를 고쳐봅니다.

일보일배, 일보일배의 마음과 정성으로 평화와 통일의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국방비 증액 과연 타당한가

- 함택영 교수 인터뷰 -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8% 증가한 18조9천억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국방예산 증액분 1조4천억 원은 전체 예산 증액분 2조4천억 원의 60%에 이릅니다. 경제가 어려운 이 시기에 한미동맹 재조정이 논의되는 것과 맞물려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군축문제에 관한 얼마 안 되는 전문가 중 한 분인 함택영 교수를 모시고 국방비 증액과 미국산 무기도입의 문제점에 대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이 인터뷰가 평화군축운동을 중점사업 중의 하나로 벌이고 있는 평통사 회원들의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 편집자 주

날 짜 : 2003년 8월 22일

장 소 : 제주도 서귀포 리조트 호텔

대담 및 정리 : 유영재 평화군축팀장

▶ 바쁜신 중에도 ‘평화누리 통일누리’독자들을 위해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평화군축운동을 표방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요성에 비춰 이 분야의 전문가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군축문제에 관한 얼마 안 되는 전문가 중의 한 분이신데, 선생님께서 특별히 이 분야에 관해 전문적인 연구를 해오신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죠?

이론적 관심과 함께 한국의 평화와 안보를 생각하면서 군사문제를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80년대 말까지는 민간의 독자적인 연구 시각을 갖기 힘들었죠. 관련 자료나 학술도 한 쪽으로 치우쳐 있었습니다. 국방부나 군자료는 기본 데이터에서부터 문제가 있었으니까요. 분석적 시각도 없었구요. 저는 지나치게 현실주의 이론에 치우치는 국제정치학 이론을 바로잡아서 우리 안보와 평화 통일에 기여하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80년대 후반의 학계 움직임이 경제주의 일변도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갖게 되어서 군이나 국방문제 등 국가중심의 구조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자주국방의 기본은 자주의식에 있어

▶ 국방부는 우리나라 국방예산이 GDP의 2.7%에 불과하다며 자주국방을 위해서 내년에는 GDP 대비 3.2%, 중장기적으로는 세계평균인 3.5%로 국방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국방부의 주장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국방비 규모로 볼 때, 우리의 군비부담이 반드시 GDP 대비 3.5%를 목표로 해야 하는가는 의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안보위협이 높은 국가이지만, 국방비는 가상적국의 능력과 위협, 국방 소요제기 및 우리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결정되는 것이지 남들을 무조건 따라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욱이 현재 우리 경제의 어려운 여건을 살펴볼 때, 군비부담 및 이에 따른 예산을 대폭 늘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향후 경제적으로도 부작용을 낳을 것입니다.

▶ 국방부는 자주국방을 위해 전력투자비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첫째, 국방비를 늘려 미제 신예무기를 많이 사들인다고 자주국방이 이룩될지 의문입니다. 자주국방을 표방한 지 거의 30년이 되었지만 대미의존 심리는 여전합니다. 이는 한국군의 인적 자질이 부족해서라기 보다는 전시작전통제권의 문제 및 부단한 교육·훈련·교류·기획과 공동작전, 군사전략적 사고를 통해 한국민의 대미 안보의존 심리를 재생산하는 미국의 해계 모니가 관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책수립에서 작전운용, 무기체계 선정에 이르기까지 미국에 의존하는 한 자주국방은 요원합니다. 국방비 증액이나 첨단무기 도입이 곧 자주국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국방의 기본은 자주의식에 있는 거죠.

둘째, 내년도 국방예산안이 목표로 한, 42%라는 대폭적인 전력투자비 증액이 가능할지 매우 회의적입니다. 최근 한미간 합의에 따라 용산 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모든 비용은 한국측이 부담하게 되어있는데 그 규모는 최소한 수십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를 수년간 분할한다 하더라도 전력투자비는 재조정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력증강을 하겠다면 양적 증강, 즉 외연적 투자에 더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무형전력인 인적·조직적 역량에 대한 투자, 즉 부대 및 장비의 운영유지비와 전력투자비의 균형 잡힌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군은 첨단기술군을 약속해왔지만, 지상군과 해공군의 균형 잡힌 소수 정예의 전력구조 양성에는 미흡했습니다. 그 결과 최근 국방비 가운데 병력유지비가 사실상 50%를 넘는 후진적인 예산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셋째, 당장의 전력증강, 즉 장비구입은 시급하지 않습니다. 통일국군에 대비하여 미래의 전력증강을 기하는 연구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제시한 일부 대규모 전력투자 계획은 사업의 적절성이 적습니다. 예컨대, K1A1전차는 북:남 주력전차 비율(약 1.5:1), 한반도 지형상 전차전력이 지니는 한계, 인민군의 노후화된 전력을 볼 때, 불요불급한 사업입니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MD무기의 도입입니다. 신형 패트리어트 미사일(PAC-3)을 도입하는 SAM-X사업은 사실상의 MD참여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미·일 외에는 MD계획을 가진 나라가 별로 없거든요. PAC-3는 미사일 요격능력이 입증되지 못했고, 우리 지리적 여건에서 효용성이 낮으며, 너무 비쌉니다. 또 주변국과의 마찰과 군비경쟁을 유발하게 됩니다. 더욱이 초강대국인 미국도 장거리(나이키)와 중거리(호크) 대공미사일을 패트리어트 단일체제로 교체했는데 한국이 나이키를 패트리어트로, 호크는 이미 개발중인 한국형 중거리대공미사일(KMSAM)로 각각 교체하겠다면 그건 과욕이죠.

끝으로, 대규모 군비증강은 그 동안 이룩한 일정 수준의 남북신뢰 구축에 역행하여 다시 군비경쟁을 심화시키게 됩니다. 북은 남과 첨단 군비경쟁을 벌일 힘은 없지만 나름대로 남측의 약점을 위협하는 비대칭전력을 배양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막대한 군비투자를 한 뒤에도 확고한 안전보장을 누리지 못하는 '안보 딜레마'에 봉착할 것입니다. 우리 국방정책은 평화통일정책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남북한은 동북아의 군비통제 및 군축을 지향해야 합니다. 국제안보협력과 '합리적 방어충분성'에 의거한 한반도 공동안보가 요청되는 것이죠.

▶ 국방부가 작성한 '2002~2006년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연 6%의 국방예산 증액으로

‘첨단 전략군’ 육성을 주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갑자기 28.3%의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면서 주요 분쟁대치국의 국방비가 GDP 대비 6.3%인데 주요 분쟁대치국 중 하나인 우리는 세계 평균에도 못미치니 최소한 세계 평균 국방비인 GDP 대비 3.5%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노 대통령이 자주국방 하겠다고 하니 국방부가 과거 억제되었던 것까지 포함해서 늘려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세계 GDP 대비 군사비 평균이 3.5%인데 대치상황에 있는 우리나라가 이보다 훨씬 못 미치니 국방비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국방부가 인용한 자료는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SS)의 ‘Military Balance’입니다. 그런데 ISS는 보수 관변기관이고요. 세계적 권위를 갖는 군사통계는 이 밖에도 미 국무부의 ‘세계군비 및 무기 이전보고서(WMEAT)’와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 연감이 있습니다. SIPRI는 진보적 기관이죠. 미 국무부의 세계 GDP 대비 군사비 평균은 2.4%(1999)이고, SIPRI는 2.5%(2002)입니다. 기관마다 통계 수치가 다른 것은 계산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ISS 통계는 각 나라의 GDP 대비 국방비 통계를 평균낸 것이고, SIPRI 통계는 전 세계의 GDP 총계를 전 세계의 국방비 총액으로 나눈 것입니다. 전자를 단순평균이라고 하고 후자를 가중평균이라고 하는데, 후자가 더 합리적인 것입니다. SIPRI 자료에 기초해 보면, 전 세계 군사비의 43%를 차지하는 미국 국방비를 뺀 세계의 GDP 대비 군사비 평균은 1.43%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볼 때, 국방부가 자신에게 유리한 통계를 선택하여 우리나라 국방비가 세계 평균인 3.5%에도 못 미치니 내년에 3.2%까지 증액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이죠.

▶ 국방부는 국방비 대폭 증액의 명분으로 ‘자주국방론’을 펴고 있습니다. 또 노무현 대통령도 8·15 경축사에서 “앞으로 10년 내에 우리 군이 자주국방의 역량을 갖추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국방부와 노무현 대통령이 말하는 ‘자주국방’이 동일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국방부는 ‘자주국방’을 말하면서도 그 구체적 방안으로 국방비 증액만 요구하고 있어요. 이런 점에서 국방부가 노무현 대통령의 말을 이해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진정한 자주국방 의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자주국방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아직 없지만 당선자 시절부터 자주국방에 대한 강조는 계속 해왔습니다. 노 대통령이 말하는 자주국방이란 ‘한미동맹 틀 안에서 주한미군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자주적 대북 억지·능력을 갖자’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자주국방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기본 철학이 있어야 하고, 둘째로 안보독트린이 있어야 하고, 셋째로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군사력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세 번째만 얘기 되고 있어 유감입니다.

쪹그런데 노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자주국방 토대 구축을 위해서 ‘정보와 작전 기획능력의 향상, 군비와 국방체계의 재편’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은 모순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미국을 제외하고는 완전한 의미의 자주국방을 할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어요. 심지어 영국도 그렇죠. 우리나라의 경우 자주국방의 기치를 처음 든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

다. 박 대통령은 닉슨 독트린의 충격, 군사원조 중단 등을 경험하면서 ‘자주국방’을 추구했습니다. 그것은 미국과의 갈등 속에서 미군이 철수하거나 감축하더라도 우리 국방을 책임지자는 소극적인 것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한국적 전략무기 즉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국방비를 우리가 감당할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도 상당히 부담하는 상황입니다. 기본화력은 주한미군이 없더라도 대북 억지력이 충분합니다. 다만 정보전력은 주한미군에 거의 의존하고 있는 형편인데 이에 대한 의존을 줄이자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한국의 MD 참여, 미국 요구 때문

▶ 국방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전력투자비의 증가율이 42%에 이르고 또 그 대부분이 PAC-3나 조기경보기, 공중급유기 등과 같은 값비싼 미국 무기 도입사업에 쓰여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MD참여 논란도 불거지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무기들을 도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한미동맹이 유지된다면 과연 중복되는 무기를 가져야 하는가 의문입니다. 또 우리의 군사적, 경제적 여건에 비추어 볼 때, 현시점에서 공중조기경보기 같은 무기가 필요한지도 의문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정보전력 추구에는 한이 없습니다. ‘조기경보기 다음에는 U2기’, ‘U2기 다음에는 감시위성’ 하는 식입니다. 국력수준에 맞는 전력이 필요한 것이지, 미국이 가지고 있으니 우리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미국식 무장이 필요 없다.”는 이란 국방장관의 말은 음미해 볼 만합니다.

MD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방부의 언행에 차이가 있습니다. 국방부는 겉으로는 부정하면서도 구체적으로는 MD무기들을 들여오려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미간 목계에 의해 한국이 MD무기체계를 사들이는 것을 통해 일본과 함께 여기에 편입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대중 정권이 반대했던 것이 다시 추진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요구 때문입니다.

국방부가 전력증강비를 42% 늘려달라고 하는 것은 IMF와 햇볕정책으로 억제되었던 것을 노 대통령이 자주국방을 주장하는 이 기회에 만회해보자는 국방부의 의도가 깔려있다고 봅니다. 나이키 장거리 미사일이 노후했으니 첨단무기로 바뀌어야 된다고 말하는데 전투기로 대응이 가능한데 꼭 그래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우리 경제력과 경제기술수준에 적합한 무기체계를 고려해야죠.

또 한가지 문제는 각종 첨단무기 공급국이 거의 미국이라는 것입니다. 조기경보기의 경우 경합 기종도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전력증강사업에서 국산무기 비율을 높이자던 방침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산 F-15K 완제품 도입이 그 예입니다.

주한미군 재편은 미국의 동북아와 세계패권 전략에 따른 것

▶ 미국 월포워츠 국방부 부장관이 6월 2일 한국에 와서 국방비의 증액을 요구하는 등 미국의 국방비 증액 압력이 매우 집요합니다. 이에 관한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미국의 고도의 책략이 돋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효순이, 미선이 투쟁으로 미국

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확산되자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 ‘주한미군 재배치’ 등을 주장하면서 국민의 안보불안감을 조성하여 반미투쟁을 잠재우는데 성공했습니다. 또 한국 대통령의 저자세 외교를 통해 노무현 정권의 실체를 확인하고 한국을 봐주는 것처럼 ‘주한미군 철수 안할 테니 무기 사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주한미군 재편은 미국의 동북아와 세계패권전략에 따른 것으로서 미국이 원래 계획했던 것입니다. 한국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죠. 이는 한미동맹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한국에 전쟁이 나면 미국이 도와야 한다고만 생각했지, 미국이 전쟁할 때 한국이 도와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미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파병을 결정했고 이후에도 그런 일들이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일방적 안보시혜 관계가 아니라 한국이 미국에게 안보재화를 제공해야 하는 관계로 변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한반도의 대 중국 동북아전초기지 역할을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육군의 임무를 한국에 넘겨 한국군의 지상군 중심 구조를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압력에 대해서 군에서 잘 대응해야 하겠죠. 힘이 달리면 국민 성원을 받기도 하구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미국이 한미관계를 ‘대중국 지역동맹’으로 변질시키려는 것에 대하여 단호하게 비판해야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미국 군산복합체의 압력이 상당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를 극복해야 합니다.

▶ 최근 미국의 요구에 따라 용산 미군기지와 미2사단 재배치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데, 용산기지 이전에만 30~50억불이 소요되는 등 천문학적 액수의 국민부담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는 주한미2사단으로부터 특정 임무를 이양 받더라도 국방중기계획에 그 예산이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그 외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건 한미간의 협상의 문제라고 봅니다. 국민들이 우리 부담을 줄이도록 요구를 해야죠. 이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정임무 이양, 특히 대포병 전력 부분과 관련해서는 비용부담이 많이 되겠죠. 대포병 레이더나 다연장로켓(MLRS), 전술지대지미사일(ATACMS) 등을 구입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투입될 것입니다. 70년대 같은 경우에는 미국장비를 무상이나 염가로 넘겨받았거든요. 그런데 미국 요구에 따라서 아파치 헬기나 PAC-3와 같은 신규무기를 산다는 것은 생각해볼 여지가 많지요. 이런 무기가 과연 필요한가 하는 의문부터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부차적으로는 미국 압력에 따라 미국산 완제품을 살 것이 아니라 국산품을 개발해서 사용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 전력의 양적우위는 현실적 의미없어

▶ 국방부는 국방비 증액의 이유로 ‘북한 위협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북한 전력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먼저 북한의 재래식 전력으로 인한 위협은 현저히 약화되었습니다. 북한 전력의 양적 우위는 남한 전력의 질적 우위뿐만 아니라 에너지 부족 등으로 기동능력 자체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도 현실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미사일이나 특수부대 등 비대칭적 전력에 의한 위협이 있습니다. 또 장사정포나 방사포

로 서울을 공격할 수 있다는 지리적 유리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남한이 전력을 증강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포병 레이더 및 기타 진함장비를 통해서 '작전계획 5027'을 통해서 수도권에 피해를 막겠다고 하지만 그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렇게 볼 때 상대의 모든 위협에 완벽한 대비를 한다는 '절대안보' 개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접근은 서로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비생산적인 것일 뿐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북한의 위협은 본질적으로 군비투자로 해결할 일이 아닙니다. 분단된 민족으로서 통일의 대상이라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남북 간의 신뢰와 평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6·15공동선언 이후의 남북관계 진전은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예측불가능하고 무모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50년 동안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북한이 전략적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실적 증거입니다.

▶ 국방부는 또한 '미래의 불확실한 안보위협'을 내세워 국방비 증액의 불가피성을 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군사비는 크게 운영유지비와 전력투자비로 나뉩니다. 이 중 전력투자비는 다시 무기·장비 구입비와 연구개발비로 분류되는데 무기·장비 구입비는 또다시 보전투자비와 신규투자비로 나뉩니다. 이 중 보전투자비는 현존하는 무기와 장비를 보수하고 대체하는 비용이고 신규투자비는 말 그대로 새로이 군사력을 증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보전투자비 이상의 전력투자비 즉 신규투자비와 연구개발비는 미래의 불확실한 안보위협에 대비하는 투자비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신규투자와 연구개발을 계속해왔기 때문에 이미 미래의 불확실한 안보위협에 대비해 온 것입니다. 이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점에서 국방부가 새삼스럽게 미래의 불확실한 안보위협을 내세워 국방비 대폭 증액의 불가피성을 말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것이죠.

국방부는 또 '포괄적 안보개념'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비군사적 대응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포괄적 안보 문제를 군사적 방법으로만 해결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따라서 국방부가 이런 문제를 다 책임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군사비로 다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구요. 정치외교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병력감축 통해 장병복지 증진 가능

▶ 국방부는 장병들의 사기와 복지를 위해서 국방비 대폭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이 국방비 대폭 증액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요?

장병 사기복지를 증진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국방비를 늘려서 장병 사기복지를 증진하자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력 증강과 장병복지 증진 모두를 위해 국방비를 늘려야 한다면 국민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군사력에는 질과 양이 있습니다. 공사판에 가보면 알지만 사람은 줄고 장비는 늘어납니다.

마찬가지로 군사력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병력을 장비로 대체해야죠. 북한군 규모가 클 수밖에 없는 것은 장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거꾸로 병력에 소요되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장비를 들여올 예산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또한 병력에도 질과 양이 있습니다. 무조건 숫자만 많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첨단 소수정예 병력을 육성해야 합니다. 북한군이 많다고 그것을 병력으로 대응해야 한다면 그것은 미련한 짓입니다. 장비로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전 세계가 병력을 감축하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병력을 줄이면 장병복지 개선도 가능합니다. 이것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군만 구조개혁 회피해선 안돼

▶ 국방예산을 효율화하고 절약하기 위해서는 군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미국이 한국군에 원하는 것은 물론 지상군 위주의 병력구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국 입장이지요. 균형 잡힌 소수 정예군 육성을 위해서는 군 구조 개혁, 특히 육군의 축소가 필요합니다. 유독 군만 구조개혁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군비부담을 줄이면서도 장병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는 현품 구입보다 연구개발에 더 힘을 쏟아야 합니다. 국방부 말대로 '미래의 불확실한 안보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그렇죠. 미래의 안보위협에 대비한다면 현존 무기를 구입하는데 돈을 쏟아 붓는 것은 타당성이 없죠.

그리고 군에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민군 연합을 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IT분야의 강국인데 이 분야에서 민간과의 연합을 해야 채산성 있는 연구개발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마지막으로 중점사업 중 하나로 국방비 증액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평통사 회원들을 위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국방비 증액 반대에 대한 논리 개발을 치밀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방비를 늘린다고 해서 평화가 오느냐'하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방비를 줄이면 평화가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냐'하는 질문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 합니다.

자주국방과 주한미군 재배치는 종속적 한미동맹 강화의 두 축

평화네트워크 대표 정옥식

노무현 정부의 이른바 ‘자주국방’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한국의 자주국방 노선이 미국의 신군사전략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라고 할 수 있다. 언뜻 보면 자주국방이 ‘탈미(脫美)’의 과정처럼 보이지만, 한미동맹의 구조와 성격,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한미 양국이 추진 중인 미래의 한미동맹 발전 구상을 보면 그렇지 않다.

‘자주국방’이라는 말은 두 가지 점에서 근본적으로 검토해 봐야 한다. 하나는 ‘누구로부터의 자주인가’이고, 다른 하나는 ‘누구의 위협을 막을 것인가’이다. 미국과 종속적인 군사동맹 관계를 맺고 있고,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미국으로부터의 자주이고 북한 위협에 대한 국방을 말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을 염두에 둔 ‘자주적 억제력 확보’는 이미 우리 정부가 독자적인 대북 억제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주국방보다 상위의 국가전략인 평화번영 정책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더욱 중요하게는 ‘과연 자주국방이라는 말에 어울리게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를 점차 줄여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특히 미국이 군사패권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군사동맹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한미동맹도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서 노무현 정부가 자주국방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데 대해서 주목해야 한다.

자칫 노무현 정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면서 대미 종속 심화는 물론이고 우리의 안보 자체를 저해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노무현 정부의 자주국방을 한미동맹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자주국방’과 ‘주한미군 재배치’는 한미동맹 강화의 두 축

실제로 정부의 ‘자주국방 비전’은 한미동맹에서 동떨어진 계획이 아니라 한미동맹의 하위 개념이다. 노정부의 자주국방론은 미국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주한미군 재배치와 함께 한미동맹 재조정의 두 축을 이룬다. 정부가 자주국방 개념을 ‘협력적 자주국방’으로 규정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미동맹 재조정의 맥락에서 노무현 정부의 자주국방 비전을 보면, 한미동맹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전제로, “한국은 대북억제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미군은 한국방위의 보조역할을 하면서 지역 안정 역할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역할 분담을 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한미동맹을 지역동맹 수준으로 강화시켜 나가되, 대북 억제력에서는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대중국 봉쇄 전략에서는 미국이 주도적 역할을 각각 해나가는 것이 한미동맹 재조정의 요체이며, 한국의 자주국방은 대북 억제력 확보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미는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회의에서 지금까지 미군이 맡아온 10개 특정임무 가운데 9개를 한국군에 조기에 이양하기로 합의했다. 여기에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책임, 북한 특수부대의 해상침투 저지, 후방지역 화생방 오염제거, 지뢰살포 작전 등이 포함된다. 또한 주한미 2사단이 주로 맡아온 대포병 작전 계획도 한국군에게 조기에 이양될 전망이다. 이를 두고 정부와 대다수 언론은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시킨 것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내용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한가지 중요한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하드웨어 차원에서의 한국군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반면에, 소프트웨어 차원에서는 여전히 종속적인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JSA 경비임무를 이양 받으면서도 유엔군 사령부의 지휘체계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나, 자주국방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를 2005년 이후에나 논의하기로 한 것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자주국방과 주한미군 재배치를 아우르는 한미동맹 재조정이 ‘뇌’는 여전히 미국이 차지하되, 대폭적인 국방비 증액을 통해 한국군의 ‘팔·다리’ 근육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한미동맹 재조정을 통해 한국군의 군사력과 역할이 강화된다고 해서, 이것이 한국의 대미 종속성의 탈피나 미국의 대한반도 군사전략의 약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한미연합방위체제의 총군사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것이 한미동맹 재조정의 골자이기 때문이다. 즉, 지금까지의 한미연합방위체제의 총군사력을 ‘100’이라고 하고 한국과 미국이 각각 50씩을 맡았다고 가정하면, 앞으로는 총군사력을 ‘200’으로 높이고 한국과 미국이 각각 100씩을 맡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군의 역할의 ‘절대치’는 높아지지만 ‘상대치’는 거의 변화가 없게 된다.

주한미군이 3~4년에 걸쳐 약 110억 달러를 투자해 대대적인 전력증강에 나서겠다는 것이나, 노무현 정부가 국방비를 대폭 증액해 자주적인 대북 억제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물론 앞서 언급한 것처럼, 물리력의 증강 과정에서 자주국방의 핵심 요소인 전시작전권 환수는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동안에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자주적 대북 억제력 확보와 선제공격 전략의 만남

그렇다면, 이러한 한미동맹 재조정이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위험성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바로 노무현 정부의 의도와 관계없이 ‘예방전쟁(preventive war)’에 입각한 미국의 대북한 선제공격 전략 기반이 상당 부분 닦여질 것이라는 점에 있다. 북미간의 긴장이 해소되지 않고 있고 미국이 무력 사용을 비롯한 다양한 대북한 강압 수단을 구체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한미군사력의 재조정을 경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질게는 1994년 전쟁위기 이후부터 짧게는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자신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북한 선제공격이 가능하도록 작전계획과 군사력 구조, 그리고 한미·미일 동맹을 변화시켜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원하는 형태로 한미 동맹이 재조정되고 이 과정에서 머리를 여전히 미국에게 지배당하는 현실 속에서 팔·다리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한국군의 전력이 강화되면, 미국은 머지 않아 대북한 군사 행동에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다.

전방 배치된 2사단과 용산기지를 후방으로 이동시키면 미군은 북한의 막강한 야포 사정거리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또한 패트리어트 최신형인 PAC-3 등 다양한 미사일방어체계(MD) 무기를 한반도 안팎에 배치하면 북한의 미사일 전력을 적지 않게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감시·정찰·표적지정 등 정보 전력을 크게 강화시키는 동시에 정밀 타격 및 심리전 능력을 강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군사력 변형이 진행된다면, 미국은 자신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북한을 선제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여기에 덧붙여 한국과 일본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토대까지 마련되면 그 자신감은 배가될 수밖에 없다. 미국이 오히려 한국의 군사력 강화를 요구하면서, 일본의 역할 확대를 압박하고 있는 것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문제이다.

이처럼 노무현 정부의 자주국방 비전은 ‘튼튼한 안보’와는 정반대로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국방비 증액 및 무기도입 반대운동을 대중적으로 펼쳐자!

평화군축팀장 유영재

우리 평통사는 2001년 공격용 헬기 도입저지투쟁을 벌여 국회가 2002년 관련 예산 모두를 삭감시키게 했다. 이어 2002년에는 F-15K도입 반대투쟁을 가장 앞장서서 헌신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이 투쟁을 국민적 투쟁으로 만드는데 기여하였다. 이들 무기도입 저지투쟁의 의의는 평화군축운동을 대중적으로 벌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했다는 데 있다.

재창립 평통사는 이런 투쟁의 성과를 계승하여 평화군축운동을 중심 실천사업의 하나로 삼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시점에서 이 운동을 우리의 중심사업으로 전개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본다. 이 글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벌이고 있는 국방비 증액과 무기도입 반대운동의 의의를 정리하고 이 투쟁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우리의 과제를 공유하기 위한 것이다. 이 글이 평화군축운동론을 정립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국방비 증액 및 무기도입 반대운동의 의의

1) 미국에 대한 군사적 종속을 막고 민족자주를 실현하는 대중운동

국방비 증액 및 무기도입 반대운동의 첫 번째 의의는 미국에 대한 군사적 종속이 심화되는 것을 막아내는데 있다.

국방부가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고 미국산 무기를 도입하려는 것은 본질적으로 미국의 신군사전략에 호응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은 코소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침략 등에서 검증(?)된 기동력과 신속타격능력을 핵심으로 하는 자신의 신군사전략을 한반도에 관철하기 위해 '한미동맹 재조정'을 한국에 강요하고 있다. '한미동맹의 재조정'은 그 구체적 내용이 이른바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회의'의 의제로 되고있는 용산 미군기지 이전, 미2사단 재배치, 한미연합전력의 획기적 증강, 한미간 군사임무 전환 등인데 그것들은 모두 동북아패권 강화와 대북한 선제공격을 노리는 미국의 군사전략적 요구와 필요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미국은 여기에 소요되는 대부분의 예산도 한국 측이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용산 미군기지 이전에만 30~50억 달러가 들어가는 등 '한미동맹의 재조정'에는 수백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요구대로 '한미동맹 재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한국은 미국의 하위군사동맹으로 더욱 깊숙이 편입될뿐 아니라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주한 미군 지원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국방부가 '연 6% 증액으로 첨단군을 육성'한다는 자신들의 '국방중기계획'을 무시하면서까지 이례적으로 내년 국방 예산으로 28.3% 증액을 요구했던 것이나, 정부가 초긴축으로 편성한 2004년 전체 예산 증액분 중 60%나 되는 1조4천억원을 국방예산에 우선 배정하는 것은 모두 이와 같은 미국의 압력에 따른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우리가 국방비 증액과 미국산 무기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곧 미국의 압력을 반대하는 것이고 그에 따른 대미 군사적 종속 심화를 막는 일이다. 나아가 미국이 자신의 신군사전략을 한반도에 관철하는 것을 저지 또는 지연시키는 의의를 갖는다.

2) 남북 사이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를 촉진하는 대중운동

국방비 증액 및 무기도입 반대운동의 두 번째 의의는 남북 사이의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줄이는데 있다.

남한의 군사비 누계는 1980년을 전후하여 북한을 추월하기 시작했고, 현재 군사비는 북한의 10배나 된다.(양쪽 당국 공식 통계) 또 국민총소득(GNI)은 북한에 비해 28배나 되며, 인구도 2배가 넘는다. 이런 예에서 보듯이 총체적 전쟁 수행능력에서 남한은 북한을 압도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은 향후 4년간 북한 군사비의 무려 7~8배에 이르는 110억 달러를 전력 증강비에 투입할 계획이다. 여기에 더하여 남한이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고 첨단 무기를 대거 도입한다면 한반도의 긴장과 갈등은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도 실질적인 진전을 보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국방비 증액과 무기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남북 사이의 군사적 긴장과 갈등 고조를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는 남북 사이의 화해와 평화 실현에 기여하는 일이다.

3) 국가경제 위기와 민생난을 해결하는데 기여하는 대중운동

국방비 증액 및 무기도입 반대운동의 세 번째 의의는 민생복지 예산을 확충하고 생산적 분야에 대한 투자재원을 확보하는데 있다.

한정된 국가예산에서 국방비에 많은 돈이 들어가면 다른 부분의 예산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런데 정부는 내년도 예산 전체 증액분의 60%를 국방비에 우선 배정했다.

IMF시절에는 국방비가 최초로 0.4% 감소한 적이 있다. 그런데 지금은 생활고를 비판한 가족동반자살자가 속출하고 청년실업자가 양산되는 등 IMF보다 경제가 더 어렵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추가 세금 수입이 어려워 초긴축 재정을 편성하면서도 국방비를 전체 예산 증가율 2.1%의 4배나 되는 8%나 증액하려 하고 있다. 이는 어려운 국가경제와 도탄에 빠져 있는 민생을 완전히 도외시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국방비 증액과 무기도입 반대운동을 벌이는 것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어려운 민생과 경제를 외면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 국가경제 회생과 민생복지 재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큰 것이다.

이 밖에도 국방비 증액 및 무기도입 반대운동은 정치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냉전, 수구세력의 물질적 토대를 약화시키고 그 영향력을 축소시킨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미국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줄이고 그들의 영향력 확대에 제동을 건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국방비 증액 및 무기도입 반대운동의 과제

1)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먼저 국방비 증액 및 무기도입 반대운동의 전문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

이 운동과 관련한 평통사의 내용적 준비정도는 우리나라 평화운동 단체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앞서 있는 편이지만, 전체운동의 요구에서 보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우리는 아직 국방예산에 대한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무기체계와 그 도입과정 등에 대한 연구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 우리 수준은 그나마 어렵게 입수한 개략적이거나 단편적인 정보와 자료들을 토대로 우리의 관점에서 총론적이고 원칙적인 요구를 제시하는 정도이다. 물론 이 정도라도 이전보다는 진전된 것이며, 헌신적인 투쟁이 결합됨으로써 그나마 일정한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여기에 만족할 수는 없다.

국방부나 보수세력들은 우리가 꿈도 꾸볼 수 없는 엄청난 예산과 인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이 그들에 의해 모니터링되고 있으며, 우리 주장에 대한 대응논리가 바로 준비되고 있다.

우리가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 연구인력을 확보해야 하며, 재원과 연구 체계도 마련되어야 한다. 더 이상 현장 실천가들이 연구와 이론까지 도맡기는 어렵다.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가칭)평화군축연구소' 설립을 이른 시일 안에 구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우리가 전문성을 높이는데서 또 한가지 돌파해야 할 장벽은 정보접근권 확보문제다.

전문성 향상을 위한 출발은 정보와 자료 입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국방부 등은 걸핏하면 '국가안보' 또는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우리의 자료 제출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의 정보접근권이 결정적으로 침해당하고 있다.

이 장벽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군사기밀보호법'을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관점에서 획기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기밀'로 묶어두는 부분을 과감히 해제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보공개법'도 대폭 손질해야 한다.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실질적인 정보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법이 '정보차단법'이라는 오명을 벗도록 해야 한다.

2) 대중성을 강화해야 한다.

언론의 여론조사를 보면 현재 대중의 60~70%가 국방비 증액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주요 근거는 '북한위협에 대비해야 한다', '독도 등에 대한 일본의 도발에 대비해야 한다', '자주국방을 위해서는 국방비 증액이 필요하다', '장병 사기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 등이다. 이는 모두 국방부가 국방비 증액을 위해 내세우는 논리들이다. 즉, 국방부의 주장이 대중들에게 먹혀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필자가 국방부를 비롯한 전력증강론자들과 몇 차례 직접 토론해 본 결과에 따르면, 우리의 논리가 그들의 주장에 비해 설득력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찌 보면 이런 결과는 당연한 것이다. 그들의 주장에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과장되고 허위적인 내용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언론기관이나 여론매체를 장악하고 있는 정부당국이나 보수세력의 국방비증액 홍보 논리가 일방적으로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이는 우리의 대응에 따라 대중의 지지는 얼마든지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대중속에 파고들어 우리의 논리를 대중들에게 얼마나 효과적이고 쉽게 전달하느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방비 증액과 무기도입 반대의 정당성을 대중이 쉽게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중의 현재 상태나 정서를 면밀히 고려하여 간명하면서도 쉬운 대중적인 구호제시, 요구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근거제시, 국방부 논리에 대한 설득력있는 반박논리 개발, 신문·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의 적극적 활용들이 요구된다.

그리고 운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중적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언론을 활용하는 문제, 정부 및 국회 대상 활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3) 연대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이전과 달리 시민사회운동진영은 국방비 증액과 무기도입 저지운동에 대한 관심이 있는 편이다. 그래서 기획예산처에 대한 투쟁 등에 여러 단체들이 함께 연대활동을 하고 있다. 이는 시민사회운동진영 내에 이 운동에 대한 요구가 어느 정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평통사는 각 단체의 실정과 조건에 맞게, 그리고 연대활동의 현실을 고려하여 연대활동을 적극 제안하고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연대활동은 분산된 힘을 모으고 대중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한반도의 전쟁 종식, 평화협정 체결!
-정전협정 체결 50주년, 워싱턴 자주·평화대회(7·24~27) 참가기-

상임대표 홍근수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7월 22일, 인천공항을 떠나 비행기 연결 관계로 일본에서 하루 밤을 묵고 다음날 뉴욕으로 향했다. 걱정했던 뉴욕공항에서의 입국 수속은, 시간은 걸렸지만, 잘 끝나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공항에는 하루 늦게 서울을 출발한 고영대 위원장과 김용진 한청협 부의장, 한총련 대표 조현실 국민대 학생회장 등이 먼저 도착해 송학삼 자주연합 뉴욕지부 회장 등 동지들과 함께 마중 나와 있었다. 정광훈 의장이 오지 못해 아쉬웠지만 김영 목사와 한신대 김상일 교수 내외까지 한국에서 온 참석자는 모두 8명이었다.

승용차 편으로 뉴욕을 출발하여 밤늦게 워싱턴의 NAKA(National American-Korean Association) 사무실에 도착했다. 거기서 이형우 선생과 자주연합 워싱턴 지부 동지들과 함께 최종적으로 7·27 대회 일정을 조율하였다.

민중의 시각에서 본 평화

7월 24일(목)부터 주 행사가 시작되었다. 이날부터 4일간 진행된 ‘워싱턴 자주·평화 대회’는 ‘민족자주·평화 실현 미주위원회’가 주최하였는데, 여기에는 대부분의 미주 민족민주운동단체들이 각자 주관·참가·후원단체 자격으로 참여하였으며, 최초로 미국의 메이저급 평화운동단체들과도 연대함으로써 대회의 의의를 높였다.

이날 오후 2시부터 미 상원 의원회관인 러셀 빌딩에서 ‘Korea Peace Forum’이 개최되었다. 한국의 의원회관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방문증을 받아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하나 테러 위협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미국의 상원 의원회관을 출입하는 데는 그런 복잡한 과정을 밟지 않아도 되었다. 검색대를 지나가는 것이 고작이었다.

‘Korea Peace Forum’은 국내외 인사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승만 목사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20여 한국, 미국 언론사들이 행사를 취재하였으며, 힐러리 상원의원 등 몇몇 상, 하원 의원 비서관들도 눈에 띈었다.

그러나 당초 참석하기로 한 미 상원 전 외교위원장 민주당 조셉 바이든 의원과 현 상원 외교위원장 공화당 루가 의원이 참석하지 않아 실망을 주었다. 박길연 북한 유엔 대사가 백악관의 불허로 포럼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자 그들도 참석을 포기한 것 같다는 게 주최측 설명이었다. 대신 양 의원 보좌관들이 주제 발표를 했다. 그들은 현 부시 정권의 대 한반도 정책에서 벗어나지 않은 방어적인 주장으로 일관했으나 부분적으로 부시 정권의 일방주의에 대해 문제 의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질의 시간에 고영대 위원장은 정전협정 체결 직후 맺어진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정전협정에 위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미국의 일방적인 대 한반도 정책의 근본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불평등 조약인 만큼 하루 빨리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조셉 바이든

의원 보좌관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어떤 내용이 불평등한지 자신은 아직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후 정광훈 의장의 발표문을 자주연합 워싱턴 지부의 서교혁 동지가 발표했으며, 나는 여중생 사건을 중심으로 하여 오만한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에 대해 발표하였다. 나는 부시 정권에게 한국민의 자주성을 짓밟는 오만한 대 한반도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리고 체결된 지 이미 50년이나 지난 정전협정은 즉각 평화협정으로 대체되어야 하며, 북미관계를 정상화하는 것만이 북핵 문제를 푸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하였다.

포럼이 끝나갈 무렵 콜로라도 출신의 캠벨 상원의원이 찾아와 지금 상원의원들 중 한국전 참전 용사는 자신과 다른 의원 두 사람뿐이라며 한미관계에 대한 자신의 보수적인 생각을 피력하기도 하였다.

한국인 활동가들과 미국인 평화운동가들과의 연대

7월 25일(금) 오후 5시부터는 워싱턴 외곽 한성옥에서 한미 평화운동가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국제조직으로서 ‘한미 관계 전국위원회(National Committee on US Korean Relations)’가 결성되었다. 이 단체는 결성 목적을 한미간 평등, 민족 자주, 한반도의 전쟁 위협 해소와 긴장 완화 등에 두고 있는데, 이승만 목사와 버트 레이니(레이니 전 한국 대사의 부인)가 회장을, 이행우 선생이 회계를 맡았다. 이 조직을 결성하게 된 배경은 한국 문제는 더 이상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의 문제이자 세계의 문제라는 데 있다.

‘코리아 민족민주운동 토론회’

7월 26일(토) 오후 3시부터는 우리가 묵고 있던 윈담 호텔에서 노길남 민족통신 대표의 사회로 ‘코리아 민족민주운동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토론회에는 미국 각지에서 모인, 10대에서 80대에 이르기까지 약 200여 명의 한국인들과 필리핀 등 소수 민족, 그리고 소수의 미국인들의 참석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규모와 열기로 볼 때 한국내의 어떤 토론회보다도 성황을 이루었다.

이날 발제는 한호석, 고영대, 김용진, 서승희 씨가 맡았다.

한호석 선생은 한반도 정세에 전반을 개괄하는 내용을, 고영대 위원장은 2000년 매항리 투쟁 이후 최근 여중생 투쟁에 이르기까지의 민족자주운동의 현황과 전망을, 김용진 위원장은 한국 청년운동의 현황과 과제를, 서승희 씨는 미국 내 민족민주운동의 과제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발제 후 질의응답에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 및 관련 하위 협정에 대한 질의와 민족민주운동과 여성운동과의 관계 등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7·27 정전협정 체결 50주년, 워싱턴 자주·평화대회’ 및 문화행사

7월 26일(토) 오후 7시부터는 토론회와 같은 장소에서 최관호 선생의 사회로 ‘7·27 정전협정 체결 50주년, 워싱턴 자주·평화대회’가 개최되었다. 이행우 선생의 인사말에 이어 평생 비폭력 평화운동을 벌여온 조지 윌로비(George Willoughby)와 내가 연설하였다.

조지 윌로비는 지난 냉전 시기 모스크바까지 걸어서 행진함으로써 세계적으로 알려진 8순

노인이다. 그는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희망하였다. 나는 주로 북핵 문제에 대해 연설하였다. 나는 미국의 대북 압살정책, 특히 대북 붕괴 시나리오인 ‘작전계획 5030’을 폐기할 것을 역설하였다.

이어서 일본 등 세계 각지에서 보내온 연대사가 낭독되었다. 연대사는 한결같이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함께 투쟁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이었다.

대회의 2부 순서로 ‘자주와 평화의 그날까지’라는 문화행사를 가졌다. 뉴욕, LA 등 미주 각 지역에서 온 풍물패, 노래패들의 공연과 부시 정권이 일방주의를 풍자하는 풍자극 등이 활기차게 펼쳐졌다. 이날 공연은 서울의 민족민주운동의 문예 역량에 필적하였으며, 자정까지 계속된 공연 속에서 200여 명의 참석자들은 연령을 뛰어넘어 하나가 되었다. 제국주의 나라 미국의 수도 워싱턴 한 가운데서 우리 민족의 자주·평화의 열기를 맘껏 발산하는 자리였다.

‘자주·평화 실현 백악관 집회’

7월 27일(일) 낮 12시부터는 백악관 남문 근처 일리프 공원(Ellipse Park)에서 한반도 자주와 평화를 촉구하는 집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7·27 행사의 절정이라 할 수 있는 이날 집회의 주 슬로건은 ‘한국 전쟁 종결, 평화협정 체결’이었다.

한국에서 온 김종일, 김용진 위원장과 조현실 한총련 대표가 연설하였으며, 필리핀, 중국 대표 등의 연대사가 이어졌다. 미국의 평화운동가들은 이라크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라는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집회 도중 부시 대통령을 태운 헬기가 집회 장소 바로 위로 지나가 참석자들이 일제히 부시를 향해 야유를 던지기도 하였다.

집회 후 백악관 주변을 도는 시위에 들어갔다. 경찰은 차량을 통제하며 우리의 행진 대오를 안내해 주었다. 차량 탑승자들도 묵묵히 기다려 주었으며, 특히 주최측에서 나누어 준 영문 선전물을 선선히 받아 보았다.

백악관을 완전히 한 바퀴 돌아 다시 집회 장소로 돌아 왔다. 그 사이 한청협 김용진 위원장은 한청협 회원들이 작성한 수천 통의 항의 엽서를 백악관에 전달하기 위해 백악관으로 갔으나 접수 거부로 전달하지 못했다.

정리 집회에서는 해글러 목사가 연설하였다. 그는 한국인들의 자주·평화 노력을 지지한다고 연설하였다.

이로써 3박 4일에 걸친 ‘7·27 정전협정 체결 50주년, 워싱턴 자주·평화대회’는 모든 일정을 마쳤다. 이번 워싱턴 자주·평화대회는 단결과 연대 및 참석의 규모로 보나 그 열기로 보나 이후 미주 민족민주운동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대회였다고 하겠다.

[연설문]

한국과 필리핀에 대한 간섭 반대!
전쟁을 끝내라, 지금 당장 평화 협정을 체결하라!

필리핀 민중 연대 네트워크 아나 리자 카발레스

미국 주도의 침략전쟁에 반대하여 단결한 투쟁적, 진보적인 필리핀 민중을 대표하여 여러분께 따뜻하고 굳건한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국전쟁 종식과 평화 협정 체결을 요구하는 한국국민들 및 동지들과 함께 하는 것은 무척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필리핀 시민사회는 미국 정부의 국수주의와 '애국적 행위'라는 이름아래 자행되고 있는 세계화 정책, 세계지배를 위한 전쟁을 규탄하며 강력하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족해방운동과 민족자주, 독립을 호소하는 국가 및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지도자들을 악마화 하여 테러리스트로 규정하는 것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우리 필리핀 민중들과 평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 민중들은 부시와 그의 신보수주파벌의 본질을 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초강대국적 지위와 최첨단 대량 살상 무기를 최대한 이용하여 '제국'을 건설하려는 미국의 야망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앙아시아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원전과 원유 공급로를 장악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침공을 감행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원전을 직접 통제하고, 전 중동 지역을 미국-이스라엘 연합에 종속시키기 위해 이라크에 대한 침공을 감행했습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 중에도 줄곧 테러반대라는 구실아래 필리핀에 미군을 재배치하고, 핵무기 비확산이라는 구실아래 북에 대한 협박을 계속해왔습니다. 우리는 필리핀과 Korea에 대한 미국의 호전적 조치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아시아 전체에 대한 미국의 헤게모니를 관철하려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미국 전략가들은 필리핀을 동북아시아의 발전된 국가(일본, 한국, 북한, 중국)로 구성된 축과 동남아시아의 개발도상국으로 구성된 축을 잇는 기술의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필리핀이 경제, 정치, 문화적으로 가장 발전된 아시아 나라들 사이에 있기 때문에 필리핀을 가장 확실하게 의거할 수 있는 유리한 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리핀에 미군기지를 재건설한다는 것은 남중국해를 통한 세계 무역의 절반에 접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에 대한 미제국주의자들의 협박은 경제적 독점과 헤게모니 장악을 위한 미국의 보다 큰 계획의 일부입니다.

미국은 북을 다음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위기 상황은 한 순간에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북에 대한 전격전을 개시하기 위해 남한에 군사 기지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부시와 그의 불한당들이 아무런 벌도 받지 않고 북에 대해 공격한다면, 이것은 전 세계 평화를 사랑하고 정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위엄에 커다란 상처로 될 것입니다. 우리는 쿠바, 이라크, 팔레스타인과 같은 억압받는 민족들과 함께 미제국주의, 미군

과 미국의 핵무기, 경제적 제재에 맞서 단결하여 투쟁할 것입니다. 우리는 민족 자주와 정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단결하여 투쟁할 것입니다.

한국과 필리핀 민중들은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전 세계의 민중의 지지와 민주적 힘을 기꺼이 누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미 제국주의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민중의 분노와 강력한 저항을 정면으로 받아야 할 것임을 명심하라 !”

“ 미제국주의자들이야말로 세계에서 첫째가는 테러리스트이다 !”

“ 미군이 점령한 곳은 해방될 것이다 !”

번역 | 인천평통사 오혜란

평화와 통일을 위한 8·15 민족대회 방북기행문

전국빈민연합 의장 김홍현

당신과 손잡고 보통강가를 거닐고 싶습니다
버들가지 밑으로 난 오솔길을 말입니다

.....중략.....

그들은 남루 하였어요
그러나 누구나 순진하고 따뜻하였습니다

그들은 끈고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디서나 당당하고 의연하였습니다

남과 북 어느 산 기슭에도 내일의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하략.....

내가 평양에 다녀온 즈음 비슷하게 다녀온 김영환 의원이 쓴 시이다. 위 시의 몇 줄에서 그
욱하게 풍겨나오는 평양의 향기를 당신은 느낄 수 있는가. 평양은 과연 그러했다.

내가 순안공항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많은 환영인파가 꽃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3년전
남북의 두 정상이가 가슴 벅찬 상봉을 했던 곳. 그 때의 감격인가, 공항 아스팔트 열기인가,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고 코끝이 아릿해져 온다. 환영인파의 열렬한 환영속에 함께 ‘조국통
일’을 외치며 걸어가는데 자세히 보니 평시민들이다. 어디 예쁜 얼굴 하나 없이, 대부분 검
게 그을린 얼굴에 화려한 색상의 한복은 그야말로 우리나라 어딜가도 만날 수 있는 민중들
의 모습 다름 아니었다. 나중에 안 것이지만 이북에서는 한복이 정장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무슨 행사때나 혼상제때만 입는게 아니라 격식있는 자리면 양식정장보
다도 훨씬 더 많은 수를 채우는 옷인 것이다. 어쨌든 첫만남의 기억은 남과 북이 다르지 않
음을 가슴벅차게 확인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공항을 나와 배정된 버스를 타고 가며 보았던 광경들을 좀 자랑해야겠다. 군데군데 개천에
는 떡을 감는 아이들과 한가롭게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고, 도로옆 굽은 가로수 아
래서 더위를 식히는 사람들은 우리의 한가로운 여름 오후와 다르지 않았다. 보통강 일대를
지나오는데 이 곳 경치가 끝내준다. 앞서 소개한 시에서도 그렇듯 저절로 시를 읊게 하는
곳이다. 강폭은 지천정도밖에 안되지만 신선한 자연만의 아기자기함이 그대로 묻어나는 곳
이다. 그냥 심겨져 있는 나무 그대로, 풀숲 그대로인데 어찌면 이렇게 아름다울까. 먼 이국
의 강가에 와 있는 듯 하다.

보통강이 생각보다 강폭이 좁길래 안내원 동무에게 물어봤더니 보통강 일대가 해마다 수해
가 크게 나서 강을 두 줄기로 갈랐단다. 이 대공업적인 도시계획을 보라. 우리나라 서울처

럼 옆에 뭐가 있으니 뭐가 생기고, 또 그게 있으니 다른 뭐가 생기고 하는 식의 자연발생적인 도시는 계획이랄게 없다. 전체의 계획이 앞서고, 주변을 그것에 복종시켜 나가는 것이 이렇게 아름답고 청정한 보통강변을 탄생시켰다. 평양 지하철도 그렇다. 지하 300~450m를 넘는 깊이는 그야말로 냉난방시설을 따로 요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처럼 이윤이 생기기 시작할 최소한의 분기점을 훨씬 뛰어넘는 통큰 설계가 아닐 수 없다. 30년전쯤에 건설된 것이라니 그 때의 기술력 또한 대단하다 여겼다.

평양의 건물들은 거의 다 고층건물이다. 대략 10층이상 되어 보이는데 주로 국가기관, 상점, 살림집들이다. 군데군데 보수공사를 하는 건물이 많아 다시 안내원동무에게 물어보았더니 대개의 건축물이 30년전쯤에 지어진 것이라고 한다. 30년전에 그만한 건물을 지었다는 것도 놀랍지만 30년이나 지난 건물을 재건축하지 않고 보수공사를 하여 쓴다는 말이 더 놀라웠다. 그만큼 자신들의 건축술에 자신이 있다는 얘기겠고, 또 그만큼 튼튼하게 지었다는 말이겠다. 지금은 미국의 경제붕쇄 때문에 어렵다고는 하지만 70년대까지 남과 북이 생활수준과 경제력이 비슷했다고 하니 적어도 건축술만큼은 훨씬 우월했던 듯 하다.

인상깊었던 것은 건물들이 굉장히 높는데 색깔이 거의 없었다. 간혹 분홍빛 녹색빛도 눈에 띄지만 거의 회색빛이다. 처음부터 색깔이 없었던 것 같지는 않고 페인트칠이 몇 십년 지나면서 벗겨진 듯 한데 아무래도 석유가 모자란 탓인 듯 하다. 미국의 경제붕쇄 때문에 이북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없어 보인다는 느낌보다는 이남과는 비교할 수 없이 정갈한 느낌을 주는 것은 왜일까.

평양의 거리엔 생각했던 것 보다 상점이 많다. 이를 두고 자본주의화되어 가는 것이라느니 말하기 좋아하는 일부 언론들에서는 제멋대로 휘갈길지 모르겠다. 그러나 사람사는 곳에 어찌 모든 이의 수요가 같을 수 있겠는가. 내가 노점상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역시 사람사는 곳에는 자기 요구대로 필요한 물건도 다 다른 법이다. 노점상도 있다. 그 쪽 말로는 야외매장인데 주로 간단한 먹거리를 팔고 있었다. 물론 상점이고, 야외매장이고 모두 국가에서 운영하는 협동조합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장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그런지 평양 밤거리는 한적하기 이를 데 없다. 우리나라 서울 밤거리를 생각해 보라. 온갖 휘황한 네온사인들과 간판, 뒷골목에 노숙자와 각종 오물이 넘쳐나는 도심을 평양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다. 오직 인민의 필요에 따라서만 계획된 군더더기 없는 도시, 평양.

운동 숲을 이룬 가로수들 덕에 도심속의 공원이 아니라 커다란 공원속에 도심이 들어와 있는 듯 하다. 이처럼 자연친화적이고, 생태학적이며 정갈한 도심이 세계 어디에 있으랴.

평양 시내엔 차량이 별로 없다. 승용차가 간혹 눈에 띄고 사람들은 대부분 지상전철과 2층버스, 자전거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 다닌다. 평양 시내를 지나다 보면 유독 선그라스와 양산이 눈에 많이 띄는데 북쪽에서도 많이 이용하는 물건인 듯 하다.

시내거리에 굉장히 많은 선동구호관들이 있었다. 내용은 대부분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충실함을 강조, 다짐하는 문구와 선군정치의 자신감과 강성대국건설의 포부를 담은 문구가 많았다. 15일 민족대회 개막식후 능라도 공원에서 남, 북, 해외대표단이 뒤섞여서 부문별 상봉을 하며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북측의 교육성 부국장이라는 분이 일어서더니 능라도 공원과 뒤쪽의 금수산과 모란봉등 주변의 지리경치를 소개하고, 이북의 선군정치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요약하면 '선군정치는 민족수호와 강성대국을 건설하는 정치이며,

인민군대를 앞세워 전쟁의 위협을 막고 정치외교적으로 해결하는 전쟁억제력을 가진 정치,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자국을 지키는 정치이다, 94년~99년 고난의 행군을 이겨낸 승리적인 경험과 더불어 민족적 자존심과 운명을 개척하는 정치이다' 였다. 북쪽은 자기 것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것 같았다. 그 자부심과 더불어 이제껏 미국의 제국주의칼날에도 쓰러지지 않고 우리식대로, 주체적으로 행보해 나가면서 일구어온 주체적 사회주의 사회에 대한 긍지가 또한 대단하다.

이후 여러 곳을 가 보았지만 주요한 느낌은 위와 같다. 북쪽은 남쪽에서 기존에 생각해왔던 것과는 상이하게 그들 나름대로의 자유와 체제와 질서가 유지되는 곳이다. 이번 방북이 남쪽의 빈민을 비롯한 모든 민중들이 우리의 핏줄로 북쪽을 더 가깝게 느끼고, 직접 만날 수 있는, 자유로운 민간교류를 통한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도화선이 되길 바란다.

한미군사동맹의 비판적 고찰과 대안모색을 위한 토론회 지상중계

이 글은 지난 7월 29일 개최한 ‘한미군사동맹의 비판적 고찰과 대안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표된 정세진 교수의 발제문과 박기학 평통사 정책실장의 토론문을 편집부에서 요약·발췌·편집한 것이다. 최철영 교수의 글은 당시 토론회에서 토론한 글을 발췌하였다. 지면 관계상 전문을 신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한다.- 편집자 주

신한미상호방위조약의 필요성

1.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냉전시대, 남북대결 시대의 산물로서 정세변화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

현행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북한과 그 동맹군을 가상 적으로 상정하여 체결된 조약이다. 또한 그것은 이승만 정권이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해 북진통일과 독재정권 유지를 이뤄보려는 목적에서 미국에 간청하여 체결한 조약이다.

그러나 이제 냉전이 해체되었고 남북관계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과 6·15 선언으로 근본적인 전환을 맞고 있으며 일방적·수직적 한미관계 또한 더 정당화될 수 없다.

따라서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맞게 우리 주권이 존중되는 신조약이 요구된다.

2. 민족자주의식의 광범한 확산과 자주적 한미관계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요구

두 여중생 투쟁 등을 통해서 대미 종속성을 깨닫게 된 우리 국민들은 한결같이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청산과 호혜평등한 한미관계의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50년 간 전분야에서 특히 군사적 분야에서 우리의 주권을 옥죄어 온 것이 바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이다. 주한미군에게 무제한적인 치외법권을 보장하고 있는 한미소파도 그 법적 근거를 바로 이 상호방위조약에 두고 있다. 따라서 호혜평등한 한미관계 수립을 위해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하위협정들의 개폐는 이제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3.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굴욕적 성격과 독소조항들이 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굴욕적인 조약이다. 조약 4조는 미국 군대의 일방적 배치권을 규정하고 있는 바, 미국은 우리 땅 어느 곳이든 무상으로 자신의 군사기지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핵무기를 포함하여 병력과 무기를 마음대로 들여오고 나가고 할 수 있다.

또 우리 나라 영토 범위에 대한 결정권이 미국에게 있는 듯이 표현한 3조 및 그 양해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우리나라의 위상을 부정한다. 그뿐 아니라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해 체결된 각종의 하위협정들도 우리의 주권을 움아매고 있다. 1954년의 한미합의의사록은 우리의 통일에 대한 미국의 간섭을 합법화시켜 주고 있다. 작전통제권을 미국에 넘긴 것도 바로 이 한미합의의사록에 의해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해 체결된 전지지원협정은 주한미군의 증원부대에 대해서 거의 무제한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하여 체결된 각종의 하위협정들도 우리의 주권을 철저히 움아매고 있다.

대미 군사적·정치적 종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미국에게 무제한적인 주권침해를 허용하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 및 각종 하위협정의 개정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4. 미국의 일방주의를 허용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각종 독소조항들은 한반도에서 긴장을 부추기는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개정이 시급하다.

미국이 '위협'에 대한 판단을 일방적으로 할 수 있고 또 단독으로 무력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을 지속,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조약 2조나 주한미군의 전력을 한국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남한에 증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조약 4조는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미국이 자신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얼마든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한편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을 받을 때만 한국에 대한 방위 의무를 지우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애초 취지는 미국의 일방주의를 허용하는 독소조항들 때문에 그 의미를 잃고 있다. 오히려 미국은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근거로 선제공격과 북한 점령을 내용으로 하는 작전계획 5027 등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전시지원협정을 체결해 놓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일방주의적 조치나 행동을 제약할 수 있도록 한미상호방위조약이 개정되어야 한다.

[정세진 교수 발제문]

현행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문제점과 신조약안

1. 조약의 목적 (현행 조약 및 신조약안 전문)

1953년 조약체결 당시와는 달라진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현행 조약은 그 목적이 전문의 '잠재적 침략자'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과거 공산진영의 위협에 대한 한국 방위에 있다. 그러나 냉전 종식과 남북관계의 변화로 이러한 조약 목적이 근본적으로 약화되었음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신조약안 전문은 방위조약의 '새로운' 목적을 뚜렷이 부각시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동북아 번영, 국제연합 원칙 준수" 등으로 적고있다.

2. 조약의 정신과 원칙 (현행 조약 1조와 신조약안 1조 및 2조, 3조)

현행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그 1조에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 정도를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다. 그러나 한미관계가 기왕의 일방적·수직적 관계에서 호혜평등한 협력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신조약안은 "상호 주권 존중과 내정 불간섭, 호혜평등"을 제시한다. 아울러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이라는 소극적 규정을 뛰어넘어 한반도 통일과 군비축소와 같은 평화지향성과 미래지향성을 담고있다.

아울러 남북 사이의 관계가 단순히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아니라 민족 내부의 관계임을 감안하여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남북 사이의 합의를 존중하도록 해야 한다.

3. 조약의 발동요건 (현행 조약 2조 및 3조와 신조약안 3조 및 5조)

1) 현행 조약은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발동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이란 국제연합 헌장 51조에 자위권 행사 요건의 하나로 되어있는 “무력적 공격이 발생한 경우”와 동일한 의미로 보아야한다. 즉, 내전이나 간접침략의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 그런데 9·11 이후 미국의 ‘공격적 안보논리’에 의해 이 문구가 자의적이고 임의적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발동요건을 더욱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 다시말해 외부로부터의 명백하고 일방적인, 무력공격을 받은 경우가 아니고서는 한미동맹군의 무력행사를 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이에 “쌍방은 어느 일방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명백하고 일방적인 무력공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무력으로 위협하거나 무력행사를 하지 않는다”로 개정해야 한다.

2) 현행 2조 중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 라는 구절과 ‘단독적으로나’의 조건은 행위주체 면에서 한국이 인정하지 않음에도, 미국이 일방적으로 위협이라고 간주하면, 행동에 나설 수 있음을 뜻한다. 이 부분은 전면 삭제되어야 한다.

3) 제3조에서 “공통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한국이 사전 동의하지 않아도 미국의 헌법 절차만 지킨다면 선전포고나 무력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합의’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4. 방위의 지리적 범위 (현행 3조와 신조약안 4조 및 5조)

1) 현행 3조는 조약상의 지리적 적용범위를 사실상 남한에 한정하고 있다. 3조의 ‘태평양지역에 있어서’라는 표현도 방위의 지역범위를 지칭한 것이 아니라 공격의 발생지점을 가리키는 것으로, 조약체결 당시 북한을 명시할 수 없어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봐야한다. 그러나 미국은 자신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따라 태평양지역 등으로 한미연합전력의 활동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방위의 지역범위의 개악을 기도할 가능성도 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미국의 필요에 의해 현행과 같은 한국 범위를 벗어나 한국군이 해외에서 미국의 군사전략을 위한 ‘침병’노릇을 하게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신조약안에서는 방위의 지역적 범위를 조급의 혼선도 없도록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영역과 관할지역’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2) 남한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일방적인 무력공격에 따라 조약이 발동되더라도 그것은 원상회복에 그치도록 함으로써 조약의 방위적 성격을 보다 분명히 해야 한다.

5.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과 지위 (현행 조약 4조 및 신조약안 6조)

1) 현행 조약은 미군주둔의 목적이 빠져 있는데 이를 대한민국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로 명시함으로써 그 작전의 범위, 주둔 기간 등에 대한 한계를 설정하고 자의적 해석을 막아야 한다.

2) 현행 4조에 따르면 미군 당국은 사실상 원하면 언제든지 한국내의 시설과 구역에 대해 무상의 배타적 사용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있다. 즉 시설 및 구역의 공여대상을 한정시키지 않고, 영토·영해·영공 등 전토기지 주권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주한미군의 주권은 양국간의 합의에 기초한 계약관계로 변화되어야 한다. 아울러 군사훈련을 포함한 미군동향 일반에 대한 한국정부의 사전적·합리적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만 지금과 같은 주한미군의 일방주의, 우리 주권 침해 등이 제어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 “미국은 그의 육군, 공군 및 해군에 의한 일본국내의 시설 및 구역의 사용권을 허가 받는다”고 하여 형식적이거나 주권권의 행사주체가 일본으로 되어있다. 또 미일안보조약 6조에 따른 교환공문과 미일소파에 의하면, 주일미군의 중요한 변경, 부대 장비의 중요한 변경, 그리고 일본에서 발진하는 주일미군의 전투작전행동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사전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다.

3) 다만 이 같은 신조약안이 실효를 거두려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이뤄져야 한다. 한국측이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지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주한미군에 대한 주권적 통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6. 조약의 유효기간 (현행 조약 6조 및 신조약안 8조)

유효기간을 무기한으로 설정함으로써 개정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도 불평등한 부분이다. 따라서 조약의 유효기간을 예컨대 3년이나 5년 등으로 정하고, 그 안에라도 개정 필요성이 있으면 개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

7. 관련 하위협정의 개폐 원칙(신조약안 부칙)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하여 체결된 각종의 하위협정들 또한 우리의 주권을 움아매고 있다. 통일에 대한 미국 간섭의 합법화, 전시작전권 이양, 한국군병력기준 등을 규정한 한미합의의사록을 비롯하여 한미소파, 전시지원협정 등 각종 하위협정도 신조약의 제정과 함께 개폐되어야 한다.

현행조약 및 신조약안 대조표

현 행 조 약

[현행전문] 본 조약의 당사국은 모든 국민과 모든 정부와 평화적으로 생활하고자 하는 희망을 재인식하며 또한 태평양지역에 있어서의 평화기구를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고 당사국 중 어느 일방이 태평양지역에 있어서 고립하여 있다는 환각을 어떠한 잠재적 침략자도 가지지 않도록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대하여 그들 자신을 방위하고자 하는 공통의 결의를 공공연히 또한 정식으로 선언할 것을 희망하고 또한 태평양지역에 있어서 더욱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적 안전보장 조직이 발달될 때까지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자 집단적 방위를 위한 노력을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당사국은 관련될지도 모르는 어떠한 국제적 분쟁이나 국제적 평화와 안전과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고 또한 국제관계에 있어서 국제연합의 목적이나 당사국이 국제연합에 대하여 부담한 의무에 배치되는 방법으로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의 행사를 삼갈 것을 약속한다.

[제2조] 당사국중 어느 일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당사국은 단독적으로나 공동으로나 자조와 상호원조에 의하여 무력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하고 강화시킬 것이며 본 조약을 실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 하에 취할 것이다.

[제3조] 각 당사국은 타당사국의 행정지배하에 있는 영토와 각 당사국이 타당사국의 행정지배하에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금후의 영토에 있어서, 타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통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제4조] 상호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제5조] 본 조약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에 의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비준되어야 하며, 그 비준서가 양국에 의하여 워싱턴에서 교환되었을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6조]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일년 후에 본 조약을 종지시킬 수 있다.

【양해사항】

어떤 체약국도 이 조약의 제3조 아래서는 타방국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을 제외하고는 그를 원조할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다. 또 이 조약의 어떤 경우도 대한민국의 행정적 관리하에 합법적으로 존치하기로 된 것과 미합중국에 의해 결정된 영역에 대한 무력공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원조를 제공할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개 정 안

[신조약안 전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한반도에서 평화체제를 구축하며, 동북아시아에서 군사적 대결을 해소하고 공동번영을 추구하고자 하는 공동의 결의를 선언하며,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 준수를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쌍방은 상호 주권 존중과 내정 불간섭, 호혜평등의 원칙에 기초하여 우호협력을 촉진한다.

[제2조] 쌍방은 한반도 평화통일과 한반도 군비축소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쌍방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교류협력과 평화통일에 관한 남북사이의 합의를 존중한다.

[제3조] 쌍방은 모든 침략적인 무력공격을 반대하며, 관련될지도 모르는 어떤 분쟁에 대해서도 국제연합의 헌장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제4조] 쌍방은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영역 및 관할 지역에 대한 침략 또는 무력공격이 발생할 경우 서로 협의하며, 상호 합의와 각자의 헌법적 절차에 따라 행동한다.

[신설, 제4조] 쌍방은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영역 및 관할 지역에 대한 침략 또는 무력공격이 발생할 경우 서로 협의하며, 상호 합의와 각자의 헌법적 절차에 따라 행동한다.

[제6조]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상호 합의에 따라 미합중국의 군대가 대한민국 내의 시설 및 구역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전기한 시설 및 구역의 사용과 병력 및 무기체계의 반입·배치·이동·반출, 군사연습 및 작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와 사전에 합의해야 한다.

[제7조] 본 조약은 쌍방 각국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비준되어야 하며, 그 비준서가 양국에 의해 교환되었을 때 효력을 발생한다.

[제8조] 본 조약은 5년간 유효하다.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통고하면 1년 뒤 본 조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단 쌍방은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본 조약의 발전을 위해 논의할 수 있다.

[부칙] 본 조약 이전에 체결된 한미 간의 합의 또는 협정들은 본 조약에 맞게 개폐한다. 본 조약은 0000년 0월 0일, 한글본과 영어본으로 각각 2통씩 작성되었으며, 두 원문은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최철영 교수 토론문

올해 한미상호방위조약이 5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미동맹, 군사동맹관계라는 정치적인 관계를 법률적으로 표현한 법률문서입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지금 50년이 됐는데, 한미상호방위조약과 같은 동맹조약이 50년 가는 일은 드물다고 합니다. 어떤 조사결과를 보면 통상적으로 동맹조약은 13년에서 16~17년 정도 존속한다고 합니다. 국제관계라는 게 나날이 급변하기 때문에 관계가 급변한다고 하는 것은 각각의 이해가 얼마든지 중간에 상충될 수 있고 그래서 깨지기 마련이라 동맹관계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동안 한미간에 어떤 의미에서인지 이해가 일치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존속한다고 하는 것이 기념해야 될 일이고 축하해야 될 일인지, 아니면 깨름칙한 일인지 참 의심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정세진 교수님이 발표하신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정안을 중심으로 보고 왔는데, 오늘 발표된 내용은 그 동안의 논의하고는 참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의 논의들은 대체로 추상적이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된 내용은 구체적으로 조문 하나 하나를 검토하고, 검토의 결과 노정된 문제점들을 어떤 식으로 새로운 조약에 담을 것인가? 구체적인 안까지 개정안, 조문을 전부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존의 또 앞으로 몇 번 더 있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관한 다른 논의들과는 매우 차원이 다르다. 매우 현실적이고 매우 실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어느 조항을 어떻게 바꿔라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논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시된 안과 관련해서 저도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정’을 얘기했는데, 과연 한미상호방위조약이 개정돼서 존속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좀더 많이 얘기되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평통사’라고 하는 데서 폐지가 아니라 개정을 논의한다는 것이 저는 처음 굉장히 의외였어요. 개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주한미군을 존치시키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론적으로 평통사가 개정을 하자고 하는 것은 결국 주한미군을 그냥 존치시키자라고 하는 것인데, 또 조금 전에 정책실장님도 폐기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미우호조약으로 남는다, 왜 폐기됐는데 한미간의 우호조약은 왜 남아있는가? 한미간의 특별한 어떤 군사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조약 있을 필요 없어요. 폐기된다라고 하면 폐기되는 시기는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태평양 지역에서 평화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동북아 안정을 위한 또 평화를 위한 다자조약 체계로 가야지 한미간의 어떤 고리를 갖는 그런 우호조약으로 갈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평통사에서 개정을 얘기한다는 것이 참 그렇습니다.(웃음)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 과정을 강정구 교수님께서 역사적으로 길게 보셨는데, 전 이 조약이 체결되던 그 당시 그 몇년만 횡단면으로 잘라서 보면 그 당시만으로 봐도 그 반민족성은 나타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는 그 앞뒤만을 따져서 본다고 하면, 6·25라고 하는 한국전쟁 당시에 친미, 무능의 이승만 정권이 만약에 휴전협정이 되고 미국이 빠지고 난 다음에 자기 정권의 안위가 보장이 안 되는 상태가 두려워서 전쟁포로를 일방적으로 석방을 한다던가 미군이 빠지고 난 다음에 한국군만으로 단독으로 북한과 계속해서 무력 충돌을 하겠다 전쟁을 하겠다던가 이런 협박을 통해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미국에 구걸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이 조약 안에는 미군의 주둔에 관한 규정도 없었는데, 이승만 정부가 미군 주둔시켜달라고 그 조항을 넣어달라고 미국에 요구한 그런 조약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정치적으로 보면 이승만 정권이 자기 정권의 존속을 위해서, 또 미국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한국이 알아서 미군을 한국에 배치시켜달라고 하니깐 결국 자기나라 군대를 한국에 주둔 시킴으로써 한국 내에서 단순히 그 당시 냉전체제에서 공산권에 대한 어떤 방어망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한국 자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커다란 무기를 한국 안에다 심어놓는 결과가 된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매우 우리 민족의 이익과는 무관하게 특정 정권의 이익, 또 미국의 이익을 반영한 조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반도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이 한미상호방위조약도 그 기능이 많이 달라졌다고 봅니다. 즉, 냉전기간 동안 특히 조약의 체결 직후에는 동서 냉전시기에 동구권국가에 대한 어떤 군사적인 침범으로서 주한미군이 역할을 했고요. 하지만 탈냉전기에 있어서는 미국이

생각하는 세계전략에 반해서 한국이 움직이는 것을 통제하기 위한 기능으로 또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운용이 됐고, 또 냉전구조가 완전히 해체되는 90년대 이후에서는 한국정부, 남한 정부의 정책적인 자율성을 통제하기 위한 기능을 했고, 또 남북교류협력이 활성화되고 남북 간의 신뢰가 형성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도리어 남북간의 신뢰형성이나 교류협력을 이간시키기 위한 기능으로까지 전개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남북 간의 철도 연결 등과 관련해서 휴전선 내 남북한의 군사인력들이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하는 문제에 대하여 한미연합사에서 안 된다고 했거든요. 이런 것들은 결국 남북 간의 교류협력이나 신뢰회복에 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우리 민족의 이익과 반하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언제까지 존속해야 되는가? 생각 같아선 바로 폐기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그건 감정적인 표현입니다. 사실 남북 간의 관계가 얼마만큼 개선되었는가 국민적 합의가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또 남북교류협력을 넘어선 신뢰회복, 특히 군사적인 신뢰회복 정치적인 신뢰회복이 아직 완전하지 않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폐기하자! 그럼 폐기한다! 굉장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사실 북한을 얼마큼 신뢰하는가 하는 우리나라 국민의 판단은 다 틀리거든요. 그런데 좀 더 많은 국민들한테 불안감을 주는 그런 정치적 결정은 아직 힘들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장 폐기하자라고 하는 것은 물론 어렵기 때문에 개정안을 내신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현재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그 전문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잠정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동북아에 있어서의 평화상태가 확보될 때까지’라고 명문으로 규정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동북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는 언제 달성되느냐? 그건 미국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남북간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미국의 힘에 의해서 얼마든지, 뭐 강정구 교수님께서도 지금 한반도 위기는 남북 간의 갈등과 남북 간의 충돌이 아니라 미북간의 갈등과 미북간의 충돌이 야기했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한반도에서 또 동북아, 태평양에서의 평화는 미국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조약에 따르면 이 조약의 존속기간은 미국 맘대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조약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발표문 개정안 제2조에 보면 ‘한미상방이 남북교류협력과 평화통일에 관한 남북 사이의 제반 합의를 존중한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이런 규정들은 다르게 해석하면 한반도의 평화를 미국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이 결정할 수 있는 어떤 매개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런 식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남북 사이의 합의가 이뤄져서 평화조약이 체결된다고 하면 즉 남북평화조약이 체결된다고 하면 결국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얘기하는 평화는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존속기간을 일방적으로 미국에 넘겨주지 않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매개가 될 수 있는 조항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지금 개정안 제8조를 보면 ‘3년 간 유효하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3년 간의 유효기간이라고 하는 얘기는 아마도 미일안보조약처럼 10년 단위로 개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는 포인트를 주자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3년은 너무 짧습니다. 자, 현재 방위조약에 문제 있다,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을 이렇게 개정하자 논의하는 데 1년, 2년 걸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덮고 난 다음에 바로 다시 또 개정을 위한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실적인 안을 내놓으려고 하면 5년이나 10년이라고 하는 좀더 장기간을 잡아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제8조에 보면 타방 당사자에게 ‘우리는 조약을 탈퇴하겠다 라고 통지를 하고 나면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하여야 한다’라고 해왔거든요. 이것도 법률적으로 문제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오늘 우리 정부가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하겠다고 통지하면 바로 즉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그 폐기통지 이후에 주둔하는 미군들은 이제 불법적인 지위가 돼버립니다. 철수하기 전까지 한국의 의지와 무관하게 한국을 점령하는 점령군이 돼버리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한국에 배치되어 있는 미군과 미군의 기지, 시설들이 철수할 시간을 준다는 의미에서 1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두고 1년 이후에 그 종지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도 고려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비대칭성과 호혜평등성의 문제입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비대칭적 조약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내용에 있어서 의무분담에 있어서의 비대칭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체결당사국간의 힘의 비대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힘의 비대칭의 크기만큼 그 안에서 호혜평등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안보와 정책적 자율성의 상호 교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 안보를 우리보다 강한 나라에게 맡기고 그 강한 나라와 우리나라 사이의 힘의 차이만큼 우리나라의 정책적인 결정권을 상대방에게 넘겨준다는 겁니다. 그것이 비대칭성으로 인한 자연스런 결과죠. 그런데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당시의 한미관계의 힘의 비대칭성은 굉장히 심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10과 1의 관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만큼 많은 것들을 미국의 군사력에 우리가 의존해야 됐고 의존하는 만큼 우리의 정책적인 결정권을 많이 넘겨줘야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군사안보외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국내 정치에 관한 결정권도 미국에게 다 넘겨줬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세계 또는 13위권의 경제대국입니다. 체결되던 당시하고 한미간의 국력차이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국력차이가 줄어서 우리가 미국의 안보에 기대는 그 의존정도가 많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줬던 것들은 아직 아무것도 못 돌려받은 겁니다. 조약도 법률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목표로 하는 거예요. 정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각자에게 각자의 것을 그대로 주는 겁니다. 한만큼 주는 거예요. 권리가 있는 만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 것도 없는데 한사람의 것을 뺏아서 상대방에게 좀더 많이 주라고 하는 그런 법률규정이 있고, 그 법률에 의해서 강제된다고 하면 그것은 양 당사자간의 노력문서 밖에 안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자기가 받아야 될 것 이상의 것을 상대방에게 뺏도록 보장하는 문서거든요. 그러니까 현행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그 비대칭성이 극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 넘겨줬던 정책적인 자율성을 다시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 그 문제점이 있는 만큼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법규범으로서의 어떤 정당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정안에서 보면 제4조 또 제5조에서 “쌍방의 영토에 관한 침략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고 또 합의와 헌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결정한다.” 당사자의 형평성을 확보하자는 거죠? 또 주한미군의 주둔목적은 ‘대한민국의 안전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라고 규정해 놓고 있는데 요렇게 해서 법률을 좁혀놓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정책적인 자율성 뭐 그건 아니고 공간적인 범위를 좁힘으로써 우리가 좀더 얻어

오겠다 라고 하는 건데 그것만으론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발표문에서 얘기했듯이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전협정에 의하면 한반도 내에서 더 이상의 군사력의 증원, 시설, 장비의 증원이 없도록 해놨습니다. 그런데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계속해서 무력을 증강하도록 해놨어요.

그걸 고려한다고 하면 분명히 개정되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안에서는 더 이상의 군사력의 증강은 없는 총량제한, 우리나라의 군사력도 더 늘어나지 않고 또 미군의 군사력도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총량규제를 하는 조항들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